



필리핀

재정적자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타 경제지표는 양호

지난 7월 필리핀의 재정적자가 이미 금년도 목표를 초과함에 따라,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S&P's는 10월 말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필리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으나, 금년도 필리핀의 수출과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도 4%대의 비교적 무난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 확대 요인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균형재정 회복은 2001년 1월 출범한 아로요(Arroyo)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¹⁾ 가운데 하나이다. 아로요 정부가 지난해에 재정적자를 29억 달러까지 줄이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 목표가 무난히 달성되는 듯 하였으나, 금년 들어 7월까지의 재정적자

가 1,330억 페소(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이미 금년도 목표치인 1,300억 페소(24억 4,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정부는 금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1,550억 페소로 수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이 역시 지난 9월 재정적자가 1,660억 페소를 넘어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금년도 재정적자는 당초 목표치인 GDP의 4.0%를 넘어 최대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재정지출 자체가 당초의 계획보다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지만, 조세 징수체계의 비효율과 부정부패 및 탈세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년도 정부의 조세 징수는 11% 증가를 목표로 하였으나, 상반기의 비교적 건실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8월까지의 실적은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

1) 아로요 정부는 2006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금융부문 구조조정, 전력산업 자유화 등을 주요 경제개혁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진한 조세 징수는 정부 총수입의 70%를 거둬들이는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의 부실한 행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 징수의 부진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8월 BIR의 조직을 개편하고 좀더 엄격한 징수와 감시 제도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600여 개의 법인을 조세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동안의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은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 민간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자금수요가 많지 않아 정부가 국내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채권시장의 접근도 비교적 용이하였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커지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경기부양 등으로 쓰여야 할 자금이 재정적자 보전에 지속적으로 쓰일 경우, 재정적자는 장기적으로 필리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재정적자가 금리와 환율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필리핀의 국가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미쳐, 필리핀 정부의 해외

자금 차입이 어려워지거나 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재정적자의 보전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국가신용도가 추가로 하락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출 증가, 소비자물가 안정 등 다른 경제지표는 양호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경제는 당분간 현재의 성장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경제는 상반기에 4.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4분기에는 전년 대비 4.5% 성장하여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엘니뇨 현상에 따르는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정부가 펼친 관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투자도 약간 늘어났다. 상반기 소비자물가도 비교적 안정을 보여 금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아시아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반기 수출, 특히 전자제품의 수출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8월까지의 수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총수출은 10% 증가한 353억 달러로 예상된다. 수입도 8월에는 전년 대비 22.4% 증

〈표〉 필리핀의 주요 경제지표

	1999	2000	2001e	2002f	2003f
GDP 성장률	3.4	4.4	3.2	4.3	4.1
소비자물가상승률	6.7	4.3	6.1	3.3	4.0
경상수지	7,910	8,459	4,504	4,780	3,980
상품수출	34,210	37,295	31,243	35,300	34,790
상품수입	29,252	30,377	28,496	30,440	32,920

자료: IIF, *Economic Report*, EIU, *Country Report*.

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품목 가운데 특히 수출용 원자재, 중간재 및 전자부품 등 수출을 위한 수입이 늘고 있는 것은 향후 수출 증가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의 감소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경제는 당분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지만, 이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해외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

지난 9월 필리핀 정부와 협의²⁾를 가진 IMF는, 재정적자 문제가 적절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것이 투자심리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필리핀의 성장전망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IMF는 필리핀 정부에 종합적이고 자세한 재정계획을 세우고 세원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중기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그러나 2004년 5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아로요 정부가 잔여 임기 동안 비효율적인 조세제도의

개혁을 달성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인다. 세원 확보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회 인프라 개발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계속해서 재정적자 보전으로 쓰일 경우, 장기적으로 필리핀은 건전한 경제성장과 국제수지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발리 테러사태로 촉발된 동남아시아의 안보 위협은 필리핀 정부의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테러를 근절하고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실업률은 아로요 정부 출범 초기와 변함없는 1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8월 현재 필리핀 은행 대출의 17% 이상이 무수익여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출범 초기의 14.9%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민영화 계획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Philippine National Bank와 마닐라 전력, 국영전력공사의 매각이 모두 담보상태인데다, 국영기업의 매각이 진행된다 해도 발리 테러사태와 마닐라 폭탄 테러사태의 여파로 매매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鄭 絢 彰】

2) IMF, 2002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Philippines.